



PwC Korea Global Trade Solution Center



Contents

1. 트럼프 2기 주요 정책
2. 유럽의 주요 통상 정책
3. Why Total Solution?
4. Our Services
5. Successful Experiences
6. PwC Global Trade CoE(Center of Excellence)
7. Contacts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여는 열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정책 및 對 중국·멕시코 베트남 경제 강화, EU 집행위 2기의 ‘바이 유러피안’ 등 세계는 지금 중국 경제와 함께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생존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PwC Korea는 기존의 글로벌 관세 전략 및 거래구조 변경, 우회수출 대응, 반덤핑·세이프 가드 대응, IRA·CRMA 대응팀에서의 Total Solution 제공 경험, 미국·유럽을 비롯한 Global 투자 및 M&A 자문, 공급망 설계 및 구축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전략적인 Approach 및 통합 Solution을 제공하는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2기 주요 정책 - 관세



보편적 관세 부과를 주장해온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 및 공화당 압승으로 관세정책 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월 20일 취임 직후부터 對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했으며,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 역시 관세부과 사정권에 들어옴에 따라 시시각각 미국의 관세부과 발표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USMCA 등 기존의 FTA 협정에 대한 재협상 논의 등도 예상됩니다.

관세부과 정책	트럼프 1기 행정부 (2017.1~2020.12)	바이든 행정부 (2021.1~2024.12)	트럼프 2기 행정부 (예정 2025.1~)
			
관세 부과 권한 활용 시작	관세 부과 권한 활용 시작	전 행정부의 정책 유지 및 일부 강화	기존 정책 대대적인 강화
		이전 행정부에서 시행한 정책 이력 無	 보편 관세 부과 ¹ (IIEPA)
			미국 수입물품에 보편 관세 도입(10~20%)



¹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미국국제긴급경제권, 1977년 제정,尼克松 대통령이 긴급결제 위기 시 IIEPA의 전신이었던 법을 통해 10% 보편 관세 부과·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멕시코와의 '국경 위기' 사건 때 멕시코산 품목에 대한 5% 관세 인상 추진



무역확장법 232조

-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및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 공표
- 트럼프 1기 행정부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제232조² 적용 및 고율 관세 부과 방안 검토 이력 존재
-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를 개시(18.5월)했으나,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결정 유보
- 트럼프 정권 인수팀 무역확장법 도입 주장 및 도입 시 Planning 검토 불가피



상호무역법

- 불공정한 교역 환경 개선을 위해 'Agenda 47'을 통해 제시
- 무역 상대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높은 경우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제정을 공화당 강령에 명시³
- 한미 FTA 협정세율이 0%로 상호관세 부과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관세 외에 부가세까지 상호관세 부과대상으로 언급하여 영향도 분석 필요



USMCA 및 FTA

- 대선 기간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은 유럽, 일본, 멕시코, 캐나다,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라고 언급
-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원산지 규정 등 기존 한미 FTA의 개선 요구 가능성 배제 불가



무역법 301조(Super 301조)

- 2018년 7월 중국산 제품 약 340억 달러 규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작으로 2019년 9월까지 중국 수입의 약 66.4%에 해당되는 품목의 관세 인상
-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²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³ Republicans will support baseline Tariffs on Foreign-made goods, pass the Trump Reciprocal Trade Act, and respond to unfair Trading practices.

트럼프 2기 주요 정책 - 수출 통제



트럼프 정부의 수출 통제 정책은 강력한 경제 안보 수단으로서 거래 중심적 동맹국 간 관계를 기반으로 반도체 중심의 수출 통제 범위 및 통제수준은 계속 강화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우회수출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對 중국 수출 통제 강화

- 단기적으로 기존의 중심 Entity 기반 통제 기조 하에서 대상 목록을 추가하는 방향, 중장기적으로는 통제대상범위의 계속적인 확대 및 통제 기준(FDPR⁴ 등) 확대
-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⁵), HBM 및 반도체 장비 통제강화 발표('24.12)
 - Entity list 140여 개 추가 등재
 - 对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범위 HBM/제조장비까지 확대
 - 미국산과 동일 수준 통제 받는 반도체 FDPR 2종 추가



신속한 독자통제 및 동맹국 간 관계

- 전통적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의 한계 인식 속 반도체 중심으로 통제대상 범위 확대함과 동시에 보다 신속한 독자통제 마련과 거래 중심적 동맹 관계에 기반하여 차등적 수출 통제 시행
- 향후 전반적인 반도체 수출 통제 기조는 레거시 칩, 저사양 제조장비/부분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지속 확대(산업 확장 성 포함) 전망
- 미국, 신규 첨단 AI 수출 통제 조치(통제 대상 AI 반도체 칩 국가별 한도 제한) 발표('25.1)



우회수출 통제 및 정부 개입 가능성

- 对 러시아 수출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제3국 경유 우회수출의 심 국가에 대한 보다 강력한 수출 통제 제도 마련 기조 확대
- 한국과 달리 개별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지하던 수출 통제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정부 개입 가능성 증대
- 미국 상원 소위원회, BIS의 우회수출 차단 및 CP⁶ 점검 강화(CP 보고 의무화 등) 권고('24.12)

구분	국가	한도
1	한국 등 파트너 18개국 및 미국	제한 없음
2	1/3 이외의 모든 국가	각국 별 5만여 개 수준
3	무기금수국 등 22개국 (중국 등 D:5 및 마카오)	사실상 수입 불가

- 미국의 반도체 칩 수출 통제 경과

발표일	품목	허가 목적국
'22.10	AI 칩	중국/마카오
'23.10	AI 칩 통제범위 확대	우려목적국
'24.12	HBM 신규통제	(AI 칩) 우려목적국 (HBM) 무기금수국
'25.1	-	전세계(일부 국가 예외)

⁴ 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해외직접생산규칙)

⁵ 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⁶ CP: Compliance Program

트럼프 2기 주요 정책 - 공급망 및 조세



트럼프 정부는 IRA 및 CHIPs 등 보조금 및 세액공제 중심의 혜택을 제공했던 법안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중국의 견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강화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2017.1~2020.12)	바이든 행정부 (2021.1~2024.12)	트럼프 2기 행정부 (예정 2025.1~)
공급망	리쇼어링 (Re-Shoring) 인센티브 정책(조세 감면 등)으로 미국내 생산시설 투자 유인	니어쇼어링 (Near-Shoring) 미국의 주요 협력국으로의 공급망 이동 촉진 및 혜택 제공	강화된 리쇼어링 (Advanced Re-Shoring) 미국 수입 제한을 구체화, 미국 내 생산 유도(특정국 De-Coupling)
	이전 행정부에서 시행한 정책 이력 無		핵심 공급망을 미국 내로 재배치: 중국산 필수품 수입 단계적 폐지, 멕시코 등 중국산 우회 수입 고율 관세 부과
IRA (ESG)/ CHIPs	이전 행정부에서 시행한 정책 이력 無	IRA & CHIPs 제정 미국내 반도체 등 제조·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IRA & CHIPs 축소 또는 폐지 반도체, 배터리 등 보조금 기준 엄격화 중국산 원재료에 대한 제약 ↑, 폐지 가능성은 ↓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17년 당시 조세감면과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TCJA) 도입, 법인세율 35% → 21%로 낮춘 바 있음2기에서는 연방법인세율 21%에서 20%로 인하하고, 미국 생산 기업에는 15%까지 낮추는 공약 제시 및 취임 이후에도 언급		
Digital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Pillar 1 관련 다자간 협약 발효를 위해 미국 참여 필수적이나 트럼프 정부 반대 예상으로 도입 늦어질 전망Pillar 1 미도입시 EU 등 주요국은 Digital Service Tax(DST) 부과할 예정이며, 미국은 DST 도입국에 보복관세 예고		

유럽의 주요 통상 정책



EU 역시 트럼프 재집권에 따라 EU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내 산업 보호 조치를 확대하고 무역 방어 도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uy European 기조 강화

- EU GDP의 약 14%를 차지하는 공공조달에 있어 특정 전략분야의 경우 비(非)가격기준(Non-price criteria)을 도입함으로써 역내산 제품 조달을 확대, 제조업 보호수단으로 활용 계획
- 이러한 Buy European 기조 강화는 특히 철강, 알루미늄, 화학 산업 등의 보호에 초점



반덤핑 · 상계관세 등 수입 규제조치 강화

- 지난 '24.1~11월 기준 EU 신규 수입규제 조사의 약 80%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여 이는 지난 '13년 이래 최고치
- 제3국 경유 및 역내 조립·완성을 통한 관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우회조사도 확대('23년 4건의 신규조사 개시)
- 중국산 전기차 수입금증에 집행위 직권으로 상계관세 부과 확정('24.10.29)
- 지난 '24.7 개시된 에폭시 수지 반덤핑 조사는 중국뿐 아닌 한국산 제품도 대상으로 하여 우리기업에도 악영향
- (참고) EU의 수입규제 신규조사 건수(by. EU Commission)



역외보조금규정(FSR)

-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은 상계관세 등 전통적 무역규제 조치로 대응이 어려운 분야에서 보조금을 통한 경쟁 왜곡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23.7)
- 집행위는 기업의 사전신고 또는 직권으로 역외국 정부 보조금 관련 조사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급 또는 역내활동 일시제한 등 시정조치 부과 가능
- 동 규정 시행 후 전체 조사 대상 6건 중 5건은 모두 중국기업 대상이며, 태양광·풍력·통신·보안장비 등 EU 정치·안보와 직결된 산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타 국가에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반덤핑 ■ 상계관세



Why Total Solution?



글로벌 무역과 경제정책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은 항상 앞서나가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에서의 다양한 통상규제정책을 해쳐가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PwC Global Trade Total Solution Center는 이러한 역동적인 환경에서도 귀사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통상 규제에 대한 전문가 가이드

- 최신 무역 규제 및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한 실시간 update 및 Insight 제공
- 규정 준수 및 무역 전략 최적화를 위한 맞춤형 조언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

- 통상 규제와 관련된 각 항목별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
- 관세/TAX/수출 통제/공급망 등 다각도 검토를 통한 최적안 도출



운영 효율성 향상

- 공급망 및 물류 운영 간소화 전략
-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모범 사례 구현



맞춤형 솔루션

- 귀사의 특정 비즈니스 요구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

Our Services



PwC Korea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의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 전략 수립부터 통상 규제 관련 Risk 식별 및 최소화, 운영 효율화, 사후관리까지 각 기업의 Business에 부합하는 최적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Global 생산지 전략

다양한 각도에서 고객이 직면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생산지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Global 관세·통상 최적화 전략 수립
 - Global 관세 Risk Simulation(보편관세도입·상호무역 관세 등 관세 유형별 영향 분석 등)
 - 우회수출 Risk 점검 및 대안 검토
 - 관세 강화에 따른 생산지별 기업 영향 분석·최적안 제시
- 對 미 통상 이슈 점검: 멕시코, 베트남 관세 영향 분석
- 동남아, 유럽 거점 대안 국가 관세 영향 분석(경쟁환경, 원가 등 지표 분석 포함)
- 공급망 재편 등 Rebalancing 관점에서 생산거점 전략 재검토



Trade & Customs

트럼프 정부의 규제 실무 대응을 위하여 HS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 이전가격, 전략물자 등 무역 규제 자문으로 트럼프 시대의 글로벌 통상 안정성 확보 방향을 제시합니다.

- USMCA, 한-미 FTA 등 대미 원산지 자문
 - CBP 원산지 사전판정 자문 등
- 보복관세, 보편관세 등 규제 연계 품목분류 컨설팅
- CBP HS 품목분류 사전판정 자문
- 미국 연계 관세 이전가격 자문
 - First Sales, 사후귀속이익 관세 자문 등
- 수출 통제 자문
 -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미국수출 통제제도(EAR) 등



소주현
파트너



정민우
파트너



허제현
파트너



이영모
대표



김현준
이사



통상 등 무역구제

다양한 산업에서 리쇼어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중심으로 한 무역구제방법을 업계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무역구제절차에 대한 동향 센싱부터 조사 대응,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지원합니다.

- 통상대응자문(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통상대응체계 구축(다양한 국가, 다양한 제품, 생산지, 가격전략 수립 등)
- 내수시장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 조치의 활용
-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조치의 활용(미국산 제조기업의 보호를 위한 미국 내에서의 무역구제 절차 지원)
-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 원가 자문을 통한 관세 절감



한종업
파트너



김중현
파트너



정원석
파트너



이승욱
파트너



미국 세제 영향 자문

미국 법인세 및 국제조세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효율적인 투자구조/사업구조 정립 지원 및 IRA/Chips 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 변화된 세제에 대응 전략과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통상환경의 변화가 이전가격 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기업의 세무 정책 개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투자 보조금 및 세제혜택 적용 자(IRA/Chips 등)
- 투자계획 및 사업구조에 따른 법인세 및 GILTI 영향 분석
- 다국적기업의 생산 · 판매 · 서비스 법인별 거래구조 개편(VCT, Value Chain Transformation) 관련 이전가격 정책 검토
- 거래구조개선 및 Tax Incentive 활용에 따른 전체 유효세율 및 관세/기타 거래세 등 Tax Payment 최소화
-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이중과세 등 국가 간 조세분쟁 해소 지원



박준환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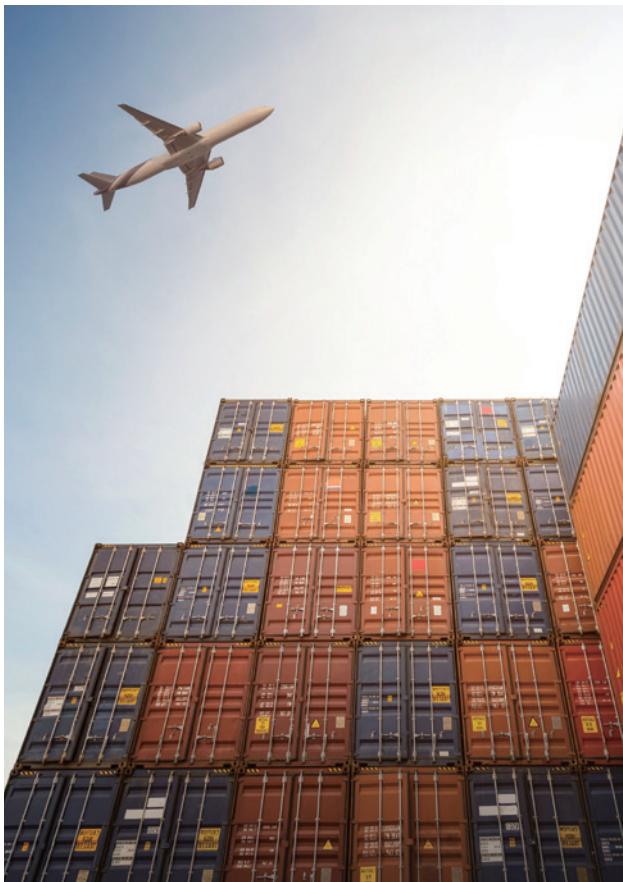


박광진
파트너

Our Services



PwC Korea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의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 전략 수립부터 통상 규제 관련 Risk 식별 및 최소화, 운영 효율화, 사후관리까지 각 기업의 Business에 부합하는 최적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FTA, IRA 및 전략물자 관리 등 통상 관련 다양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공급망 Tracing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 기업들이 규제 기관에 대한 정보 제출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IRA, UFLPA⁷ 등 공급망 규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거래 내용 Tracing 관리 체계 수립 및 시스템 구축
- 전략물자 관리 및 Sanction 대응 위한 프로세스 수립 및 운영 시스템 구축
- CBAM 등 제품 탄소량 측정 및 관리 대응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축
- Global 생산지 전략에 따른 제품/원부자재 물류경로 최적화 및 운영 시스템 구축
- Global 생산거점 신설/이전에 따른 생산 인프라 설계 및 구축

⁷ 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최준길
파트너



최재열
파트너

Successful Experiences



관세 최적화 및 수출 통제

- 글로벌 거점 관세 최적화 검토: 국내 대기업 S사, D사 등
- 글로벌/ 미주 거래구조 변경(중계무역전환): 국내 대기업 H사, C사 등
- 우회수출자문: 국내 및 외국계 Z사, I사, J사, X사 등
- 전략물자 미국 수출 통제 자문(EAR, ECP): 국내대기업 S사, H사 등



글로벌 생산지 전략(거점진출)

- 글로벌 거점 진출을 위한 국가간 비교 분석(경쟁환경, 조세, 관세 등): 국내 대기업 S사 등
- 미주 진출 자문: 국내 대기업 S사, C사, 중견기업 I사 등
- 유럽 진출 자문: 국내대기업 S사, 중견기업 E사 등
- 아시아 진출 자문: 국내대기업 S사, H사, K사, P사 등



이전가격

- 국내 주요 그룹사 Global 및 미주 이전가격 정책 검토: H그룹, L그룹, LG그룹 등
- 거래구조 변경에 따른 TP 영향평가: H사 등
- 미주 APA 자문: P사, L사, S사 등 다수
- Digital Tax Amount B 도입 영향 분석: H그룹 등



PI System

- FTA 대응 원산지 증명 위한 PI 및 시스템 구축: D사 H사 등
- CBAM 등 제품 탄소량 측정 및 관리 대응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축: S사
- 전략물자 관리 및 Sanction 대응 위한 PI 및 시스템 구축: H사 등
- IRA 등 규제 대응 위한 공급망 Tracing PI 및 시스템 구축: A사



북미지역 특화 관세

- 북미 자유무역협정 CBP 원산지 검증 대응: 국내 대기업 K사 등
- 미국 통상무역법 제301조 보복관세 자문: 국내 및 외국계 기업 I사 등
- 미국 보복관세 대응 품목분류 사전심사 대응: D사 등
- 미국 CBP 원산지 사전판정: 국내 대기업 S사 등
- WCO 품목분류 위원회 상정 자문: 국내 대기업 S사 등



국제조세

- 글로벌최저한세 검토: 국내 주요 그룹사 및 대기업 다수
- 해외 진출투자구조 검토: 국내기업 L사, E사 등
- 미국 법인 통합 및 분할 자문: 국내 대기업 S사, K사 등
- 미주 거래구조 변경 세무 영향 검토: 국내 A사, D사, E사 등
- 미국 투자구조/지분구조 변경 자문: 국내 A사, S사, H사 등



반덤핑 등 무역 구제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등 - 국내 대기업 S, C, H, Z, L사 등(전기전자/반도체/제지/가구 등 전 산업군)
- 통상대응체계 구축자문: 국내대기업 S, C, H그룹사 등
- 통상제소자문: P사, C사 등



PwC Global Trade Solution CoE



PwC Korea는 유관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풍부한 미국 PwC, 유럽, Asia Pacific 등의 국가와 Global Trade Solution CoE(Center of Excellence)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및 Case Study 등을 활발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 국 전문가팀의 Insight를 실시간 Update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최고의 통상 관련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Claudia Buying Damsté

Customs &
International Trade

PwC
Netherlands

PwC
Germany

PwC
United States



Anthony Tennariello

Principal, Customs and
International Trade



Chris Desmond

Principal, Customs &
International Trade

PwC Korea



Dr. Michael Tervooren

Customs &
International Trade

PwC
Singapore
(APAC)



Frank Debts

Asia Pacific Trade &
Customs Leader



David Wijeratne

SCM, Global Rebalancing
Global Practice Leader

Contacts



강 명 수
GTSC 센터장
myung-soo.kang@pwc.com



전 원 엽 Partner
국제조세총괄
won-yeob.chon@pwc.com



정 민 우 Partner
해외진출자문
min-woo.jung@pwc.com



한 종 엽 Partner
무역구제(반덤핑)
jongyup.han@pwc.com



김 중 현 Partner
무역구제(반덤핑)
joong-hyun.kim@pwc.com



정 원 석 Partner
무역구제(반덤핑)
won-suk.jung@pwc.com



이 승 육 Partner
무역구제(반덤핑)
seung-wook.lee@pwc.com



소 주 현 Partner
통상
so.juhyun@pwc.com



박 광 진 Partner
해외세제
kwang-jin.park@pwc.com



박 준 환 Partner
이전가격
jun-hwan.park@pwc.com



허 제 현 Partner
해외M&A
je-heon.heo@pwc.com



최 준 걸 Partner
공급망시스템
jun-kirl.choi@pwc.com



최 재 열 Partner
공급망시스템
jaeyoul.choi@pwc.com



이 영 모 Partner
관세
youngmo.lee@pwc.com



김 현 준 Director
수출통제
hyun-jun_1.kim@pwc.com

www.pwc.com/kr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02W-BR-009

© 2025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